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 초안과 대동소이, 유료방송 중심의 정책 여전

12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최종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11월 14일 초안이 공개되었을 때 엄청난 반발이 일었던 유료방송 중심의 UHD 발전은 일정 정도 조정하는 액션만 취했으며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여부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도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또 유료방송에 대한 8VSB 허용을 재차 확정하는 동시에 방송을 공공의 영역이 아닌, 철저한 산업발전의 결과물로 재단하는 시각이 그대로 묻어나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공공의 영역인 방송을 100% 산업적 가치로 재단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종합계획의 비전을 '방송산업을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구현'으로 정하고 ▲방송산업규제혁신 ▲방송콘텐츠 투자 확대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방송 기술 선도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5대 전략과 19개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성장 제일주의에 방점을 찍었다는 비판이다. 동시에 모호한 문구와 세부 계획의 구체적인 시기를 누락한 부분은 사업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당장 종합계획 초안에 실린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송을 산업적 가치로만 평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적인 가치가 크게 축소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유료방송 중심의 정책 로드맵으로 굳어졌다는 뜻이다. 실제로 초안에 실린 유료방송 규제 완화는 산업발전을 이유로 종합계획 최종안에 그대로 실렸다. 여기에 정부가 이번 종합계획 실행을 통해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장밋빛 공약을 내세웠지만, 일각에서는 2년 전 종합편성채널 개국 당시 약속한 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무산된 사례를 들어 산업발전 진흥 부

분에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UHD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모습이 엿보인다. 한국방송협회를 중심으로 유료방송이 주도하는 UHD 발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이번 종합계획은 UHD 발전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기 때문이다. 계획안에 'UHD 방송의 상용화는 콘텐츠 제작·수급과 기술 R&D(연구개발)·표준화 현황,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해 추진하기로 한다'는 부분을 두고 많은 언론은 일단 지상파 방송사의 UHD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UHD 자체를 프리미엄 콘텐츠로 분류하는 시각은 여전한 것으로 보여,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매체별로 UHD 로드맵을 설정하겠다는 종합계획의 청사진에 주파수 수급에 따른 지상파의 UHD 전략이 쉽게 녹아들기 어려운 점도 변수다. 이 문제는 최근 TTA 운영위원회에서 지상파 UHD 표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드러나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5면 심층분석 참조)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은 초안과 같이 전격 허용으로 가닥이 잡혔다. 종합편성채널 특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면돌파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시청권 침해 문제 및 짝퍽 디지털 전환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부담이다. 지상파 방송사와 IPTV의 8VSB 허용 반대입장이 여전한 가운데 해당 아이템이 방송산업발전과 전혀 관계없는 특혜라는 비판도 고조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8VSB 허용의 현실적인 문제도 급부상하고 있다. 아날로그 TV를 보유한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 가입자에 배포될 컨버터의 가격이 4~5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무상으로 배포할 경우 예산확보 문제(약 2,500억 원)가 돌발변수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8VSB는 계획안의 독소조항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2면에 계속)

최진홍 rgdsz@kobeta.com

182호 방송기술저널은 선정 연휴로 인해
1월 8일 신년특집으로 발행됩니다

KOBETA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 구진원(MBC) 방송기술대상 수상



(대상 수상자 구진원 MBC 차장)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63컨벤션 센터 2층 세퀘이아홀에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가 열렸다. 약 300여 명의 방송기술인들이 참여한 본 행사는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김환영 KBS 사장, 임정규 KBS 이사, 안덕상 초대 연합회장, 이종욱 KBS 본부장, 석원혁 MBC 본부장, 김석태 EBS 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김환영 KBS 사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1년 동안 활발한 활동을 통해 방송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최근 정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 정국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다"며 "훌륭한 콘텐츠와 훌륭한 기술이 결합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임정규 KBS 이사는 "방송기술의 발전이 방송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기 때문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역할에 더욱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안덕상 초대 연합회장은 "사랑으로 함께하는 방송기술인들이 자랑스럽다"며 "서로 사랑하며 방송을 만들고, 서로 사랑하며 방송기술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마지막으 최동환 연합회장은 송년사를 통해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회상하며 "방송기술인들의 단합된 힘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으며, 앞으로 방송기술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방송의 미래를 위해 힘쓰자"고 말했다. 동시에 최 회장은 2013년 한 해 동안 연합회가 걸어온 영상을 직접 시연하며 "다사

난한 한 해가 지나간다. 우리 모두 미래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본 행사에서는 연합회가 최근 리뉴얼한 CI 소개도 이어졌다. 이에 이선택 연합회 사무처장은 "기존의 단색 로고에서 탈피하여 음영을 주고, 글꼴에 변화를 줌으로써 미래방송과 기술을 선도하는 이미지를 시각화했으며, 모든 만물의 조화로우름을 나타내는 태극무늬를 기본으로 글로벌한 이미지를 추가해 지구본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CI는 2014년 본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어진 방송기술대상 시상식에서는 구진원 차장(MBC)이 대상을 받았다. 이에 구 차장은 "방송기술대상과 같은 큰 상을 받게 되어 열렬하다"며 "MBC 상암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서원들과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고 전했다. 구 차장에게는 상패와 더불어 2014 NAB 참관의 기회와 상품이 수여되었으며, 이외에도 총 20명(팀 포함)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마지막으로 석원혁 MBC 본부장은 건배사에서 "방송기술인의 미래를 위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대한다"는 말로 본 행사의 끝을 알렸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수상자명단

대 상 : 구진원(MBC)

우수상 : 김병선(KBS), 박은석(MBC), 이상진(SBS), 박명석(CBS), 조상현(YTN)

장려상 : 김민중, 김현(KBS), 박병진(EBS), 정규석(CBS), OBS송신팀, 유정찬(아리랑국제방송), 송가용(BBS), 이은희(TBN)

공로상 : 고우중(KBS), 김성훈(SBS), 신일수(EBS), 이정규(tbs)

특별상 : 정철훈(전주방송), 최진홍(방송기술저널), 김주옥(방송기술교육원)

[성명서] 방송의 미래를 위한 지상파 UHDTV 표준화를 추진하라

12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산하 조직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는 '지상파 UHDTV 송수신정합표준화 과제' 채택을 사실상 강등시켜 '기술 보고서 과제'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도 포착되었다. 총 81개의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었으나 유독 지상파 UHDTV 송수신정합표준화 과제만 집중 논의되었으며, 일각에서는 TTA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부의 입김이 있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TTA는 강등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안건을 기술 보고서 과제로 채택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할 뿐, 진정성 있는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12월 10일 전격적으로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서 잃어버렸던 퍼즐의 한 조각을 찾을 수 있었다. 종합계획은 초안에 담긴 유료방송 중심의 UHD 추진 전략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UHD 방송의 상용화는 콘텐츠 제작 및 수급과 기술 R&D(연구개발)·표준화 현황,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해 추진하기로 한다"는 말로 지상파 방송의 UHD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화 현황'을 고려하겠다는 표현을 잊지 않았다. 모든 것이 아귀가 들어맞는다. 정부는 종합계획에서 지상파 중심의 UHD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며 반발을 잠재우는 동시에, 뒤로는 지상파 UHD 표준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지상파가 UHDTV에 뛰어들 수 없도록 자조조건을 박탈해 궁극적으로 보편적 UHD 서비스 가능성을 원천봉쇄했다.

TTA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지상파 UHD 방해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단순히 유료방송 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지상파 UHDTV 송수신정합표준화 과제를 기술 보고서 과제로 변경했다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다. 게다가 TTA는 지상파 UHDTV 송수신정합표준화 과제를 기술 보고서로 강등채택한 사유에 대해 '지상파 UHDTV는 주파수 할당비율로 표준화 시기상조'라고 해명했는데, 이도 공색하기 그지없는 변명이다. 현재 '700MHz 대역 주파수 공동 연구반'을 통해 지상파 UHDTV용 주파수 할당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TTA가 앞으로 나서 표준화 작업 과제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세대 UHDTV 지상파 방송은 국제산업 경쟁 측면에서도 총각을 다루는 사안이다. 표준 등의 제반 사항은 미리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부터 막아버리는 것은 잘못된 상황판단이다.

TTA는 특정 이해관계에 따른 권한남용을 중지하라. 종합계획에 지상파 UHD 가능성을 열어두고 뒤로는 표준화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지상파에 UHD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정부가 집요하게 지상파의 UHD 전략을 방해하면서 시청자에게 돈 내고 UHD 콘텐츠를 시청하게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지상파가 제출한 UHD 로드맵을 무시하고 유료방송에게 끝없는 혜택을 퍼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당장 지상파 UHD 방해전략을 중지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고품질의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방송인총연합회(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방송촬영감독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사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여전히 문제다

철학이 없는 방송정책

12월 10일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정부가 방송정책에 확고한 철학이 없음을 고백하는 격이었다. 공공의 영역인 방송을 지나치게 산업적으로 재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시청자 편익을 고려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어디에도 진지한 고민의 흔적은 없다. 최초 발표된 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없이 표현의 정도만 조금 수정된 상태로 발표한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의 존재 이유,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 시청자 복지 등 방송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보편적 미디어의 말살로 이어지나

종합계획의 독소조항은 너무 많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특히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정부가 작정하고 플랫폼 해체의 수순에 뛰어든 것 같다. 지상파 MMS는 광고하용이 요원한 상황에서 추진하고, 짝퉁 디지털 전환인 케이블 MSO의 8VSB 허용 방침을 밀어붙이며 지상파의 근본적인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게다가 헌법으로 보장받는 지상파의 지적 재산권은 재송신 제도 개선안이라는 이름으로 그 존립을 걱정하게 되었다. 특히 유료방송 중심의 UHD 전략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다. 보편적인 미디어에 대한 말살 정책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느낌이다.

정부가 지상파 방송에게 보편적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이 아닌, 일개 PP의 역할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의 사영화를 막아야 한다

방송인총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0월 29일 방송의 사영화를 막기 위해서 '시청자 복지 외면하는 방송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700MHz 방송용 필수 주파수의 통신용 경매 시도와 맹목적인 유료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당연히 부정되어야 한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종합계획은 당장 백지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방송을 단순한 산업적인 관점으로만 재단해서는 안 된다. 시청자 복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고, 다양한 매체가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올바른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면 최소한 방송 플랫폼의 공공성을 보존하면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유승희 의원, “해직 언론인 문제, 노력하고 있다”



12월 11일 방송인총연합회(홍진표 PD 연합회 회장,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김유석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이종우 카메라기자협회 회장)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유승희 의원을 만나 해직자 복직을 위한 서명지를 전달했다. 방송인총연합회가 해직 언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19일 국회 미방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을 면담한 것에 이어 현재 국회의원을 만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총연합회는 유 의원에게 “우리는 대통령 산하 대통령 위원회에서 해직자 복직 문제를 논의하길 원했다. 하지만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성토했다. 동시에 총연합회는 “(해직 언론인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언론 환경을 바꿔줘야 언론을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 하지만 파업을 겪으며 기형적 구조로 운영돼 왔다.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은 여전히 밖에 있다. 나쁜 선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국정원 이슈에 집중되며 (해직 언론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졌다. 다른 이슈가 뿔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다”는 말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후 “(해직 언론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며 노사문제 아니다. 물러서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여당에서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다.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유 의원은 최근 국회 방송공정성특위가 종료되며 여야 의원들이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을 '노력한다'는 문구로 정리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여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한 성토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여당은 불분한 것이 없어 보인다”는 말로 해직 언론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여당의원들에게 불만을 표한 후 “방통위 위원장도 노사 합의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끓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는 말로 해직 언론인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해직 언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인총연합회가 함께 해달라”는 말로 공정언론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자는 뜻을 내보이기도 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업그레이드?

“2020년까지 통신 주파수 1.3GHz 확보”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2020년까지 통신용 주파수 1.3 GHz~1.4GHz를 확보한다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재차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16일 관련 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본 토론회를 기점으로 미래부는 2020년까지 총 1.3~1.4GHz에 달하는 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구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통신 주파수 600MHz 확대를 골자로 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초안이 등장한 이래 2.0을 기점으로 1GHz에서 1.3GHz로 통신 주파수 할당이 상당히 조정된 셈이다.

현재 통신 3사는 두 차례의 경매를 통해 총 410MHz 폭을 할당받은 상태다. 업그레이드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이 확정될 경우 약 900MHz 폭이 통신에 추가 할당될 전망이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둘러싸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통신에 막대한 주파수를 몰아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은 판단이냐에 의문부호가 달린다. 통신사는 물론, 소위

천통신 언론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업그레이드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며 모바일 트래픽 해소에 있어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지만, 모바일 트래픽 자체가 3G 시절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남발 및 무차별적인 가입자 유인에 따른 통신사의 원죄라는 점은 부당이다. 게다가 1%의 헤비 유저가 99%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정상적인 데이터 소비 구조를 방지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통신 주파수 할당을 독려하는 점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모바일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통신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나 통신사 스스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개선안을 발표해야 한다는 반론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미국의 경우 버라이즌과 AT&T가 총 21,500만의 가입자를 보유하면서도 200MHz 폭의 주파수를 할당받은 반면, 국내 통신사인 SKT와 KT는 상대적으로 적은 4,400만의 가입자를 보유하면서 290MHz 폭의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업그레이드의 당위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업그레이드 계획안에 700MHz 대역 주파수 통신용 할당이 전제되어 있는 부분은 더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미래부-방통위 공동 연구반이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두고 합의점을 찾는 상황에서 미래부의 해당 계획 수립은 연구반의 존립을 무시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또 방송용 필수 주파수로 여겨지며 난시청 해소 및 UHD 발전 등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해당 주파수의 통신 활용은 방송의 공공성을 무시는 처사라는 비판까지 더해지고 있다.

한편 미래부의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업그레이드 결정을 기점으로 최근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유료방송 중심의 UHD 로드맵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에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 할당이 결정되면 지상파 방송에 700MHz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이는 정부가 자연스럽게 케이블 및 위성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UHD 발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분석] 허울뿐인 종편 재승인 심사

개국 2주년을 맞은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승인 심사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편파·막말·왜곡 방송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 승인 과정의 편법 출자 논란까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특히 회수는커녕 8VSB 등 추가 특혜까지 고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종편의 재승인 심사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 전 발표된 종편에 대한 방송평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평가에 따르면 종편 4개사, 심지어 5·18 역사왜곡 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채널A)까지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방송평가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350점을 차지한다. 결과만 따져본다면 종편 4개사는 내년 재승인 심사에서 '조건부 재승인'이 아니라 '조건 없는 재승인'이 유력할 정도다. 편파·막말·왜곡 방송으로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종편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방송평가 중 '방송 편성 제규정 준수 여부' 항목에서도 종편 4사에 만점(30점)을 줬다. 방송 편성 관련 규정은 △오락 프로그램 50% 초과 금지 △매 반기 국내제작 60% 이상 △매 반기 외주제작 35% 이상 등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언론개혁시민

연대의 분석결과를 보면 (TV조선)과 (JTBC), (채널A) 모두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평가에서는 종편 4사 모두 만점을 받았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50%가 넘는 재방비율로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게 종편이다. 보도 프로그램 편성 역시 50%가 넘는 종편이 아닌 보도채널이라고 불리는데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가 있냐”며 의문을 표했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번 평가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앞서 방통위는 종편의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여기에는 과도한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과 재방 비율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편은 여전히 과도한 보도·시사 프로그램 편성으로 기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의 방송평가에는 이러한 부분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종편이 집중 배치하고 있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매체로써 지켜야 하는 공정성과 객관성 등 최소한의 방송 저널리즘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의 분석에 따르면 종편 시사 프로그램 패널들의

업자들의 견제가 만만치 않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유료방송의 경우 지상파 MMS가 추진되면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 관점에서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유료방송이 지상파 MMS를 반대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상파 MMS 광고 허용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종합계획은 시청권 보호를 위한 지상파 의무재송신 제도 개선안도 언급했다. 하지만 시청권 보호의 방법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유료방송의 급진적 이득을 보전해주는 쪽으로 제도개선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송신 분쟁 당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천명한 법원의 판결

대다수가 친정부적인 성향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친정부 성향의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의견만을 전달하는 편파방송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연련과 언론연대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디어 환경 전반을 위협하는 괴물 종편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며 지난 4일 '종편 국민감시단'을 결성했다. 이들은 “종편 도입에 따른 정책 목표가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뿐 아니라 잇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종편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방통위는 이 같은 여론을 무시한 채 또 다시 종편의 생명줄을 연장시키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며 직접 감시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감시단은 “종편 재승인은 반드시 종편의 총체적 타락과 부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힘과 지성의 연대로 뭉친 종편 국민감시단 활동을 통해 종편의 재승인 심사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종편 재승인 심사를 그냥저냥 넘긴다면 미디어 생태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질 것이다. 방통위가 지난 2년 간 방송시장을 교란시키고 황폐화시킨 종편을 엄정하게 평가해 정리할 수 있을지 여론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이 지상파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상파-유료방송의 첨예한 충돌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근 소기의 성과를 거둔 PP 사용자 지급 기준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PP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매년 효소평 수출 수수료의 증가분에 연동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부분은 초안과 같다. 여기에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의 시장점유율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기획, 유통까지 연계 지원하는 '제작지원 밸류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 마디

“지상파 방송의 기본 플랫폼인 주파수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저소득층의 방송 접근은 더 어렵게 된다”(이상운 남서울대 교수)

☞12월 13일 차세대 디지털 방송과 지상파 방송의 미래 세미나에서…모든 국가 인프라가 민영화되는 현재, 방송의 공공성은 민영화나 사유화가 되어서는 절대 곤란합니다. 하수상한 세월에도,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방통위는 종편에 갖은 특혜를 통해 대박을 주고, OBS에는 갖은 차별을 통해 족박을 줬다. OBS를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이훈기 OBS 노조 위원장)

☞OBS 재허가 보류 정국에서…대한민국 정부가 종합편성채널에게 바치는 노력입니다.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아~ 특혜~ 줄게~’

MBC, 미래부 장관상 수상

11월 26일 MBC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제14회 전파방송신기술상 시상식에서 고부가가치 다채널 스튜디오 솔루션을 독보적인 기술 수준으로 개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미래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MBC는 이번에도 장관상을 받은 솔루션에 대해 기술연구소와 제작기술국이 3년 동안 협력하여 국내 유일의 토종 스튜디오 방송 제작 솔루션(eXerver STUDIO)을 개발했으며, 이는 일본제품이 독점하고 있는 테이프 VCR를 대체하고 직접 파일의 녹화 및 파일 송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전했다. 당장 내년부터 맞이하게 되는 상암 MBC 시대의 방송 제작 신기원을 이뤘다는 평가다.

이번에 장관상을 받은 eXerver STUDIO는 다채널 녹화, 리스트 송출, 편집, 전송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스튜디오 용도에 맞게 구성할 수 있어 MBC 일산과 상암 신사옥 제작 스튜디오 뉴스센터를 파일 기반 제작환경으로 구축하는데 커다란 공을 세울 전망이다. 이에 MBC는 eXerver STUDIO를 향후 국산 스튜디오 표준 제작장비로 추진해 타 방송사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eXerver STUDIO의 근간이 되는 eXerver는 MBC 기술연구소가 자체개발한 비디오 서버로서 국내 최다 비디오 포맷을 지원하며, 2008년 테이프 인제스트(NPS, 아카이브)부터 TV/DMB 백업송출, 스튜디오 녹화, CG 편집, 최근 뉴스센터 뉴스송출에 이르기까지 사내 여러 제작환경에서 파일 기반 방송 장비로 활용되고 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최동환
편집주간 | 김성훈
편집위원 | 김윤중 서상원 장진영
송주호 박명석

편집장 | 최진홍
취재기자 | 백선하 이진범 김주욱
기획실 | 강동균
인쇄인 | 성전&화성프린트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전화 | 02-3219-5635
팩스 | 02-2647-6813
트위터 | @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5

KBS, 직접수신 개선의 최전선에 서다



직접수신환경 제고를 위한 지상파의 전사적인 대응이 예사롭지 않다. 디지털시청100%재단과 DTV KOREA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저인망 쌓 끝이 직접수신환경 개선작업이 속속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KBS가 제조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직접수신을 위한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다.

최근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및 700MHz 대역 공동 연구반 가동, 모바일 공개토 플랜 2.0 등 대한민국 방송환경을 좌우하는 굵직굵직한 정책

들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유료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反 지상파 전선은 낮은 직접수신율을 근거로 지상파 중심의 방송정책을 부정하는 기류가 번지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직접수신을 (2012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2012 방송매체 이용행태 분석의 오류를 잠정적으로 인정한다면) 13.3%라는 숫자는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의 외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KBS가 나섰다. KBS는 지난 10월 11일 신관 기술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조사(삼성전자·LG전자)와 수신환경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시청권 보장 작업에 착수했다. 양해각서의 핵심은 시청자가 TV를 구입할 경우 가전사는 직접수신이 가능한 안테나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동시에 KBS는 12월 4일과 6일 KBS 수원 인제

개발원에서 직접수신환경 개선작업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총 80명의 삼성전자 직원을 초빙해 직접수신 교육을 실시했다. 피교육자들은 전원 삼성전자의 서비스 센터 직원 및 수신환경개선 담당자로 이번 교육을 통해 지상파 MMS, 3DTV, UHDTV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수신설비 이해와 민원조치 방법을 숙지했다.

직접수신이 가능한 안테나 보급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이미 제조사들은 시청자들의 안테나 구매 수요에 대비해 12월부터 구매 발주에 돌입했으며 1차로 삼성전자 660개, LG전자 560개, 하이마트 600개 등 총 1,820개의 안테나가 직접수신 시청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또 제조사 차원에서도 실내 안테나 판매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상담 응대 방법 변경을 적용하고 삼성전자 직영 대리점부터 매장 내 안테나 전시 및 판매를 조금씩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분석] OBS 재허가 보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3~4년의 재허가를 받은 가운데 OBS의 재허가가 보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언론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현행 미디어법 체제 자체가 OBS에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지금이라도 OBS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허가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의 심사 결과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받은 KBS·MBC·SBS 등 8개사는 4년의 재허가 유효기간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강릉MBC·극동방송 등 29개사는 3년의 재허가를 받았다. 총점 650점 미만으로 재허가 의결이 보류된 방송사는 OBS가 유일하다. 심사 결과 650점 미만이면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OBS는 2007년 12월 개국 이후 적자가 누적돼 자기자본이 거의 잠식된 상태고, 향후 자본잠식률이 95%까지 급등하는 등 현재 경영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OBS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내놓는 구체적 계획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OBS는 방통위가 제시한 오는 20일까지 재무구조 개선 세부계획과 최대출자자의 투자 계획 및 이행각서, 기타주주의 투자이행서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만약 방통위가 만족할만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할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지위를 잃게 된다.

문제는 현행과 같은 미디어법 체제로는 OBS의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이다.

앞서 지난 10월 2일 방통위는 공영 미디어법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민영 미디어법인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지상파 3사 방송광고를 대행 판매할 때 중소 방송사·네트워크 지역 방송사와 배분해야 하는 결합판매 비율을 재고시하면서 기존 미디어법 체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당시 OBS는 미디어법 시행 이전인 2011년 광고 매출보다 미디어법 시행 이후 광고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지원 미디어법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학계를 중심으로 한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2의 경인방송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며 ‘공익적 민영방송’을 표방한 OBS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중수 수원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올해 OBS의 광고 판매 목표액은 약 300억 원인데 8월까지 실적은 185.2억 원으로 정상적인 달성을 68%에도 못 미치는 60.8%다. 애초 방통위가 1공영 1민영 체제에서 OBS의 광고를 SBS가 최대주주인 ‘미디어크리에이트’에 맡기면서 우려했던 판매대행 불이익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OBS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편파·막말·왜곡 방송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종편에는 특혜에 특혜를 얹어주고, 100% 자체 편성으로 지역성·다양성을 살리고자 하는 OBS에는 같은 차별만을 주고 있다며 방통위의 존재 자체가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후기 OBS 노조 위원장은 종편의 전국 의무재송신, 방송통신발전기금 유예, 8VSB 허용 음직임 등 종편에 대한 특혜 사례를 지적하며 “방통위는 종편에는 같은 특혜를 통해 대박을 주고, OBS에는 같은 차별을 통해 족박을 줬다. OBS를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박석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도 “방통위는 모범적인 방송인 OBS에 대해 우대는커녕 오히려 차별 정책을 펴고 있다”며 “잘못 태어난 미디어법을 폐기하고 완전히 재구성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체계, 미디어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통위는 OBS가 내놓는 자원 확보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종편과 달리 OBS에 대한 차별 정책을 펴고 있는 방통위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방통위가 방송의 지역성·다양성을 살리고 있는 OBS에 정책적 배려를 해줄지 여부에 또 다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시청자는 없고 사업자만 있다

최근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는 ‘시청자’는 없고, ‘가입자’와 ‘사업자’만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세대 방송으로 자리 잡은 UHD 관련 정책에서 지상파 방송을 배제함으로써 국민들이 시청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세미나실에서 열린 ‘차세대 디지털 방송과 지상파 방송의 미래’ 특별 세미나에 참석한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현 정부의 종합계획은 철저히 방송의 ‘산업적’ 측면만 고려했을 뿐 어디에서도 시청자의 복지에 방송의 공공성이 고려된 흔적이 없다”며 “정부는 시청자 복지,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무료 플랫폼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그 수단이 700MHz 주파수 활용이라면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종합계획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UHD 관련 정책이다. 종합계획에서는 매체별로 UHD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케이블 방송은 2014년, 위성방송은 2015년에 UHD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11월 14일 초안 기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중 상당수는 UHDTV가 3DTV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 연구팀장은 “글로벌 제조사들과 각국 방송사들이 UHDTV에 관

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UHD 시대는 생각보다 빠르게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3DTV 사례에서도 봤듯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이 기반된 디바이스가 출시된다고 해도 콘텐츠가 부족하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 능력 없이는 UHD 콘텐츠의 원활한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콘텐츠 공급보다 더 큰 문제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축소다. 종합계획에서는 UHD 방송을 프리미엄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노골적으로 유료방송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조장하고 있다. UHD는 흑백TV-컬러TV-SD-HD를 잇는 자연스러운 방송의 흐름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해 UHD를 프리미엄 서비스로 조장함으로써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를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HD와 UHD의 차이는 지금 우리가 흔히 느끼는 SD와 HD의 차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방송 자체가 보편적 서비스인 만큼 시청자들이 디지털 정보 격차를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방송철 한국방송협회 차세대 방송전략 단장은 “유료 방송 중심의 UHD 로드맵을 도입할 경우 시청자들은 돈을 내고서면 UH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될 경우 디지털 정보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은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역시 “지상파 방송의 기본 플랫폼인 방송 주파수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저소득층의 방송 접근은 더욱

분석

주파수 글로벌? 어디서 시작했을까

논리가 빈약한 거짓, 진실을 밀어낸다

700MHz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방송과 통신의 힘겨루기가 치열한 가운데, 각자의 입장에서 정리해 서로의 폐부를 찌르는 논리전쟁도 더욱 가열되고 있다. 방송은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구현이라는 공공의 측면에서, 통신은 경제적 낙수효과 및 통신기술의 비전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의 주요 논리인 ‘700MHz 전 세계 통신 활용설’이 주목받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활용하고 있으니 대한민국도 해당 주파수를 통신에 활용해야 세계적인 흐름에 도태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결론부터 하자면 ‘700MHz 전 세계 통신 활용설’은 일견 타당한 구석이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이 해당 주파수를 통신 서비스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영국이다.

우선 해당 논리에 언급되는 국가들은 대부분 700MHz 대역 주파수 전체를 통신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며, 각 국가별로 통신 활용 용도가 편이한 만큼 더욱 구체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더라도 단말기에 들어가는 칩이나 사용 방식 등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또 대한민국은 주파수 효율이 부족한 미국식 디지털 전송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 국토의 70%가 전파 도달이 어려운 산악 지형인데다 방송용으로 할당된 228MHz 폭이 다른 국가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이렇듯 ‘700MHz 전 세계 통신 활용설’은 이미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면 ‘700MHz 전 세계 통신 활용설’의 기원은 무엇일까? 그 명확한 기원은 찾기 어렵지만, 최소한 구심점이 되어준 ‘사건’은 존재한다.

과거로 돌아가 보자. 2012년 2월, 당시는 신정정치외 대명사이자 방통대군이라 불리던 최시중 전 방통위 위원장이 전격 사퇴한 지 2개월이 되어가던 때였다. 최 전 위원장이 자신의 퇴임을 일주일 남기고 기습적인

700MHz 대역 주파수 상하위 40MHz 폭 분할 통신 할당을 추진해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엄청난 반발이 벌어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 순간, 구 방통위는 문제의 보도자료를 하나 배포했다. 바로 WRC(세계전파통신회의)-12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활용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였다. 그러나 700MHz 대역 주파수는 WRC-12의 공식 의제도 아니었으며 일부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의 긴급제안으로 다뤄지긴 했지만 WRC-15, 즉 2015년에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구 방통위는 교묘한 말 바꾸기로 일부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의 ‘의견’을 WRC-12의 전체 의견으로 둔갑시켜 여론을 호도했다. 700MHz 대역 주파수를 방송에 활용하는 유럽 국가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보도자료인 셈이다.

하지만 ‘거짓 보도자료’의 여파는 강렬했다. 전문지는 물론이고 주요 일간지와 통신사들은 일제히 구 방통위의 보도자료를 믿고 수십 개의 기사를 쏟아 낸 것이다. 바로 이때 700MHz 대역 주파수의 전 세계 통신 활용설이 더욱 강력한 동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가 잘못된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 하나가 무시무시한 후폭풍을 일으키며 2013년 현재,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전쟁에도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C&K의 주가 조작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외교부가 아프리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에 투자한 C&K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언론은 기본적인 의심도 없이 충실히 베끼기에만 열중했다. 그 결과가 어땠는가. C&K를 둘러싼 총체적 사건건은 정부 부처까지 엮인 황당한 사기극으로 막을 내렸다. 해외 자원 개발 실적이라는 공적과 일부 공직자 개인의 이윤을 위해 외교부가 바람을 잡고 언론은 애먼 투자자들을 속인 공범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2012년 2월, 구 방통위는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괴이한 국가직무능력표준

방송기술 직군 말살이 창조경제?

현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막상 투쟁이 열린 결과물은 괴이하기 짝이 없다.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내용 치고는 편협하고 초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송기술 분야는 최악에 가까운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2월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은 외부 연구단체에 용역을 의뢰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한국교과진흥협회(이하 RAPA)와 함께 발표가 있기 몇 달 전부터 공동으로 방송기술에 해당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정을 추진해 왔다. 기존 표준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 표준에는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방송기술, 소분류로 지상파 방송(라디오방송/TV방송/지상파DMB/케이블방송)과 방송서비스(유무선통합서비스/방송시스템운영/정보시스템 운영/방송기술지원서비스/방송장비설치유지보수)로 되어 있었다. ***괄호한 항목은 세분류**

이에 연합회는 철저한 직무조사와 광범위한 심층분석을 통해 중분류 방송기술을 기준으로 소분류에 방송제작기술(방송영상/방송음향/방송조명/방송편집/방송중계/라디오제작), 방송송출/송신기술(지상파TV송출/지상파DMB송출/지상파라디오송출/케이블방송/위성송출/IPTV송출), 방송시스템기술(방송제작시스템구축운영/방송기술지원서비스/플랫폼통합서비스), 방송기술운용기획(방송기술기획/방송품질관리/방송기술연구)로 정리했다. 기존 표준의 오류, 즉 지상파 방송 소분류에 케이블 방송이 들어가 있거나 위성

및 IPTV가 누락된 부분을 C-P-N-D의 형식으로 최적화한 것이다.

하지만 12월 12일 발표안은 기존 표준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연합회가 RAPA와 함께 제출한 안건을 모조리 무시하고 더 과소해진 안건을 들고 나온 것이다. 실제로 새로운 표준을 살펴보면 기존 표준의 정보통신 대분류 내부 지상파 방송, 방송 서비스 소분류를 아예 방송기술로 묶어 버렸고, 내부의 9개 세분류도 3개로 줄여버렸다. 게다가 무대, 편집, 조명 등의 안건은 8번 대분류인 문화예술디자인방송으로 이동해 흡수되기도 했다. 종합하자면 편편을 찾기 어려운 방송기술 영역들을 흐릿하게 묶어 버리거나 파편화시켜 관련 직무 자체를 모호하게 분류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8번 대분류인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내부 방송뉴스는 아나운서로, 신문기사는 기자로 분류해 만약 새로운 표준이 확정되면 대한민국에서 방송기자라는 직업은 표면적으로 사라지고 신문기사와 기자도 모호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 김동규 부연구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12월 12일 공개된 표준은 말 그대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한 것이지, 절대 확정안이 아니다”며 “앞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단순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식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의견을 공유하기 위함이었다”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답을 하기도 했다. 당장 정부조직이 무리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본 취재는 집중취재 대상입니다. 추후 자세한 분석기사가 실릴 예정입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종편 미디어렙 수수료 15~19% 지상파 방송사보다 조금 높은 수준

종합편성채널이 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에 지급해야 하는 수탁수수료가 방송광고 판매액의 15~19%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의 수탁수수료율인 13~16%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현행법에 종편의 방송광고 수탁수수료율을 15~19% 범위로 정하고 이를 제11조 제1항 제3호로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미디어렙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후 입법 예고와 규제개혁심사 등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해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미디어렙 시행령 개정안은 종편의 '특혜종합선물세트' 중 하나인 직접 광고영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종편은 다른 방송 사업자와 달리 승인 후 3년까지 미디어렙 적용을 유예받아 그동안 직접 광고영업을 해왔는데 만료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TV조선>과 <JTBC>는 내년 4월 1일부터, <채널A>는 내년 4월 22일부터, <MBN>은 내년 12월 1일부터 미디어렙을 통해서 광고를 판매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선 그나마 숨통을 틔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종편이 직접 광고영업을 하면서 모기업인 신문사들을 발판으로 ‘쥐어짜기식’ 약탈적 영업을 해 업계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면서 “미디어렙을 통한다면 이러한 행위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고 토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종편의 수수료는 지상파 방송사가 지불하는 수준보다 3~4% 포인트 정도 높을 것”이라며 “정책적인 의미가 아닌 시장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와 지상파 DMB의 수탁수수료는 각각 방송광고 판매액의 13~16%와 13~18%다.

백선하 baek@kobeta.com

700MHz 할당, 늦어지나 내년 할당설 고개 ‘술술’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방송과 통신의 협허투기가 치열한 가운데, 해당 주파수 할당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미 이경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민 편익을 위한다는 전제로 700MHz 대역 주파수의 내년 할당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동 연구반에서도 주파수 내년 할당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12월 5일 지상파 방송사와 700MHz 공동 연구반은 과천 KISDI에서 만나 Q&A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동 연구반에 소속된 한 위원이 사전입을 전제로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언급을 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해당 위원의 말 속에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치열한 할당전쟁의 배경과 그에 따른 부담이 강하게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내년으로 미룬다면 이 자체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모바일 광대도 플랜 2.0을 업그레이드하며

총 1.3GHz를 통신용 주파수로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확정난 부분이 변수다. 만약 해당 로드맵이 생명력을 가진다면 700MHz 대역 주파수는 자연스럽게 통신 할당으로 무게가 쏠린다. 게다가 미래부는 2013년까지 모바일 광대도 플랜 2.0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상태다.

주파수 할당의 한 축인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도 변수다. 현재 상임위원들이 내년 3월 대부분 임기가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정상적인 주파수 할당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또 내년 초에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및 굿직 굿작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다. 주파수 할당을 위한 정상적인 논의가 긍정적인 기류를 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복수의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주파수 공동 연구반은 방송과 통신, 두 진영의 이해관계를 담은 2개의 안을 준비하고 있다. 만약 공동 연구반에서의 결론이 유야무야로 끝나면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김주옥 kjo5554@kobeta.com

단신 뉴스

글로벌 방송 콘텐츠 제작·유통의 허브가 될 ‘빛마루’가 문을 열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 내 위치한 빛마루 대형 스튜디오에서 미래부·문제부·방통위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국회의원, 지역구의원, 방송·콘텐츠 사업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행사를 가졌다.

빛마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한류월드 내 3,237평 부지에 지상 20층, 지하 4층 규모로 설립된 방송 콘텐츠 종합지원시설로 중소PP와 독립 제작사 등의 방송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송출, 유통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소 방송 사업자들이 사용하던 기존 제작시설은 스튜디오, 중계차, 송출시설, 후반제작시설 등이 개별적으로 구축돼 종합지원이 어려웠지만 빛마루는 방송 콘텐츠 제작, 편성, 송출, 유통 등의 모든 시설을 네트워킹과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연결해 워크플로우 전반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며 제작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래부(구 방통위)와 문제부는 범국가적인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지난 2011년 5월 빛마루 착공에 들어갔고, 2년 8개월 만인 올해 9월 공사를 마무리한 뒤 경기도 고양시로부터 최종 시설사용 승인을 받았다. 주요 방송지원 시설로는 드라마 제작이 가능한 500평 대형 스튜디오를 포함한 스튜디오 6개, 종합편집실 및 개인 편집실 등 후반제작시설, 중계차, PP 15개 채널을 수용할 수 있는 송출실, 온라인 콘텐츠 마케팅 지원을 위한 유통실, 최신 장비를 갖춘 교육실, 1인 창작집단을 위한 창작공간 등이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미래창조과학부가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ICT 및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양성 기능 일원화를 통해 체질개선에 나섰다. 미래부는 12월 12일 조직개편을 통해 창조경제 추진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부처 간 협업 촉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차관 소속 창조경제조정관(실장급)을 설치했다. 창조경제조정관은 범부처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창조경제 기획국과 국가과학기술심사회의의 운영조직인 과학기술정책국, 성과평가국, 연구개발조정국을 통합한 조직이며 미래부는 이러한 조직 개편을 통해 창조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건다는 복안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창조경제기획관 내 심의관을 설치하고 기존 창조경제진흥팀을 창조경제진흥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CMB의 ‘EBS Plus2’ 퇴출 지상파 MMS가 절실하다

케이블 MSO인 CMB가 서울과 광주지역 아날로그 채널에서 EBS Plus2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케이블 MSO의 공익채널 포기 논란과 더불어 지상파 MMS 현실화 속도를 더욱 끌어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CMB는 정기채널 개편을 맞아 서울과 광주지역 아날로그 채널에서 EBS Plus2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까지만 해당 채널을 편성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해당 채널을 빼겠다는 뜻이다. 이에 CMB는 EBS Plus2가 현재 편성 중인 ‘교육 어린이’ 장르 채널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분야별 1개 이상의 공익채널을 의무 편

성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관계로 해당 채널을 부득이하게 빼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EBS 관계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EBS SO 담당자들은 정통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SO들이 시장 논리에 따라 돈을 벌기 위해 돈 될 만한 채널을 입점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순 없겠지만, 학생들의 학습권과 시청권 보장이라는 ‘EBS Plus2’의 취지를 생각할 때, 제고해달란 부탁을 여러 차례 했다”며 “다른 채널에서 돈을 벌고 공익적 채널을 유지해주길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SO들이 수익성의 논리로만 채널 편성을 사고할 경우, 학생들과 직

“지상파 플랫폼,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 플랫폼으로서 경쟁력 여전해 … 한국, MMS 빨리 도입해야”

플랫폼으로서의 지상파 방송의 위상이 여전히 견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기관인 GfK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상파 TV만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1년 전 5,400만 명에서 5,970만 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10년 14%였던 지상파 직접수신가구가 이번 조사결과 19.3%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DTV KOREA 자료에 따르면 ‘The 2013 Ownership Survey and Trend Report’는 ‘The Home Technology Monitor’ 조사의 일부로, 이 보고서는 지난해 17.8% 가구들이 직접수신했지만 올해는 19.3%의 가구들이 지상파 방송에만 의존해 TV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2,240만 가구 총 5,970만 시청자들이 케이블이나 위성, IPTV 등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 직접수신으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GfK 관계자는 “지상파 직접수신가구가 점차 늘고, TV 시청자들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는 가구들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이 중요한 플랫폼으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 그동안 플랫폼으로서 지상파 방송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상파 방송 위기론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다채널 다매체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상파 방송이 가지고 있던 절대성이 예

전에 비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얼마 뒤면 지상파 방송이 PP로 전락하고, 지상파 방송이라는 단어 자체가 역속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지상파 방송이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자책이 종이책을 따라잡을 수 없듯이 아무리 많은 매체가 나와도 지상파 방송이라는 플랫폼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학계 전문가들 역시 지상파 방송 없이는 미디어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이라는 플랫폼은 공공성과 공영성이라는 일종의 공공영역으로 존재해 왔으며, 그 존재만으로 방송의 폭력성과 선정성, 상업성을 어느 정도 견제해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파 방송이 방송 산업의 중심에 서서 프로그램의 질을 어느 정도 보장하며 이끌고 있는 구조”라며 “일정 수준의 공익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 지상파 방송이 없어진다면 시청률 경쟁으로만 치닫고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 프로그램은 편파, 왜곡, 저질 방송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이 이끌고 있는 다양한 고품격 프로그램, 상업적 영향력으로 부터의 독립, 시민 커뮤니케이션의 충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업을 구하는 일반인 등에게 선의의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지상파 MMS 현실화 시기를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될 조짐이다. 공익채널의 보호와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강화의 측면에서 KBS와 함께 EBS가 지상파 MMS를 조속히 도입했다면 케이블 MSO의 EBS Plus2 편성 종료에 따른 여파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직접수신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채널 서비스를 대부분 유료방송에 의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의 구조적인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편 정부를 중심으로 케이블 8VSB 허용 가능성이 현실화된 가운데 앞으로 CMB와 같은 유료 방송 플랫폼의 공익채널 퇴출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 볼 점은 젊은 성인들이 주도하는 가구의 직접수신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18~34세가 주도하는 가구의 28%가 지상파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35~49세가 주도하는 가구들의 19%, 50세 이상이 주도하는 가구 11%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비율이다. GfK 관계자는 “이들 가구의 직접수신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젊은 가구의 21%가 유료방송에 단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라며 시청률 플랫폼으로서의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유료방송 비가입가구의 방송매체 이용 형태 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직접수신가구 중 97.7%가 앞으로도 유료방송에 가입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직접수신가구가 현재 시청환경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는 이 조사 결과는 지상파 방송의 직접수신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전환 이후 직접수신가구가 줄어들었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 디지털 전환 이후 직접수신가구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무료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직접수신가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들 역시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도입이 직접수신율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동안 직접수신 확대 정책을 방치해온 정부 당국이 유료방송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지금이라도 무료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 플랫폼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UHD분야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 ‘대한민국 3D 콘텐츠 대상 시상식’, ‘국내 인기 3D 콘텐츠 상영회’ 등을 선보였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선 글로벌 UHD분야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가 특히 주목할 만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차세대 방송을 가장 각광받고 있는 UHD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 발전 전망을 조명하고,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3NET의 Tom Cosgrove CEO, 프랑스 4EVER의 Julien Libouban, CJ헬로비전 이종한 상무 등이 컨퍼런스의 발제를 맡고, KBS와 MBC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UHD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한계를 논했다. 이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3D 콘텐츠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장소 마련했다. 미래부는 “지드래곤 2013 월드투어’, EBS ‘위대한 로마’ 3D, ‘뽀로로 슈퍼셀메 대모험’ 등 국내 인기 3D 콘텐츠를 상영했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KT가 무궁화 위성 3호를 홍콩의 업체에게 할당으로 넘겨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위성이 점유하고 있던 우주궤도 점유권도 홍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략물자인 위성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넘긴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우주 주권 상실 위험도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2011년 KT는 설계수명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무궁화 위성 3호를 홍콩의 업체에게 할당으로 매각했다. 그러자 전략물자인 위성을 국가의 승인도 없이 팔아 넘겼다는 지적과 더불어 대부분의 정보가 담긴 관제소까지 상실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여기에 주파수와 더불어 위성방송의 서브역할을 담당한 무궁화 위성 3호가 넘어감으로써 안정성이 생명인 방송의 기본취치까지 흔들린다는 비판까지 가세했다. 여기에 최근 무궁화 위성 3호가 홍콩으로 넘어가면서 국제기구가 인정한 대한민국 우주 주권도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데로라면 무궁화 위성 3호가 위치한 동경 116도 궤도의 우주 주권이 홍콩 업체로 넘어간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계약을 마친 홍콩의 업체에게 해당 위성의 궤도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도 어려워 상황은 더욱 꼬이고 있다.

당장 전략물자인 위성은 물론 관제소, 주파수와 더불어 우주 주권까지 타국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김주옥 kjo5554@kobeta.com

이진범 jnb1001@kobeta.com

한국방송협회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방송협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방송발전계획은 종합적 사고가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 구성성 없이 시장의 각 쟁점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지상파가 배제된 방송발전이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발표 직후 유료방송 편향의 정책으로만 이뤄져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방송협회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며 “유료방송이 줄곧 주장해왔던 DCS, 8VSB, 클리어람 등 각종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호응한 ‘유료방송에 대한 종합발전 계획’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에게 유무료 매체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사의 플랫폼을 말살하고 결국 국민의 미디어 복지를 크게 낙후시킬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방송협회는 이어 “UHD 등 차세대 방송 로드맵에서 최대 콘텐츠 생산자인 지상파를 철저히 배제한 것은 위성파와 케이블 등 유료매체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시청자 복지에 역행하는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미래창조과학부가 차세대 방송 콘텐츠 행사인 ‘International 3D/UHD Festival 2013’을 개최했다. 3D와 UHD 등 차세대 방송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업체간, 국가간 각축전이 시작된 가운데 열린 행사인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미래부는 지난 13일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제7관에서 ‘Where Dream Meets Reality’라는 슬로건 아래 3D와 UHD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글로벌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지상파를 압박하다

11월 14일 초안 등장 이후 12월 10일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발표되자 각 방송 사업자들은 저마다 손익계산을 두드리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언론보도만 봐도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묻어낸다. 종합계획 발표로 지상파는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매체도 있고, 종합편성채널이 최후의 승자라는 분석도 쏟아지는데가 하면 케이블 MSO와 IPTV를 위시한 통신사들이 만족해하고 있다는 보도도 봇물이 터지고 있다. 대혼란이다.

일단 대혼란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종합계획을 산업발전의 틀에서 재단하며 상대적으로 공공의 미디어 서비스가 축소됐으며, 발표된 계획안도 모호한 내용과 표현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각 방송 사업자의 눈치를 보며 주도적인 정책 수립을 세우지 못한 패착으로 해석된다. “규제를 다 풀어줄 테니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고 발을 뺐다는 뜻이다. 정부의 방송정책에 철학이 없다는 비판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에 집중해 보자. 종합계획을 분석하면 지상파도 다른 방송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득과 실이 명확해 보인다. 지상파 MMS와 중간광고 허용(광고제도 개선으로 표현되긴 했지만), 수신료 현실화 등을 얻었고 UHD 발전에 있어서도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득’이다. 다만 재송신 제도 개선안 부분과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은 지상파가 크게 반대했던 부분인 만큼 상대적으로 ‘실’로 해석된다. 유료방송 수평규제 정책도 라이벌의 개념으로 보면 지상파에 ‘실’이다.

정리하자면, 케이블 MSO의 입장에서 득은 8VSB 허용과 재송신 제도 개선안, 수평규제며 실은 지상파 MMS라 볼 수 있고 IPTV와 위성방송을 보유한 통신사에게 DCS는 득, IPTV 측면에서 수평규제는(특히 KT의 경우 사정은 복잡하다) 실에 가깝다. 이 상황에서 지상파도 득과 실이 명확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말일까?

단언하자면, 이번 종합계획의 최대 피해자는 지상파다. ‘득’이라는 이름으로 안겨진 제도들은 대부분 허상이고 ‘실’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지상파 MMS 부분. 지상파 MMS는 현재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순차적인 방송발전과 공익 채널의 역사적 관점에서 당위성을 가지는 아이템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종합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지상파 MMS가 지상파의 시장 지배자적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를 주장하며 지상파에 “공적인 책무를 다하라”고 주장하는 유료방송이 할 말은 아니다.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의 존속은 방송정책의 제1원칙으로 여겨져야 한다. 지상파 MMS는 혜택이 아니라 당위성이다. 최근 공익채널인 EBS Plus2가 케이블 MSO인 CMB에 의해 채널편성에서 누락되는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는가. 지상파 MMS가 조속히 실시되었다면 일부 지역 시청자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하는 공익적 미디어 혜택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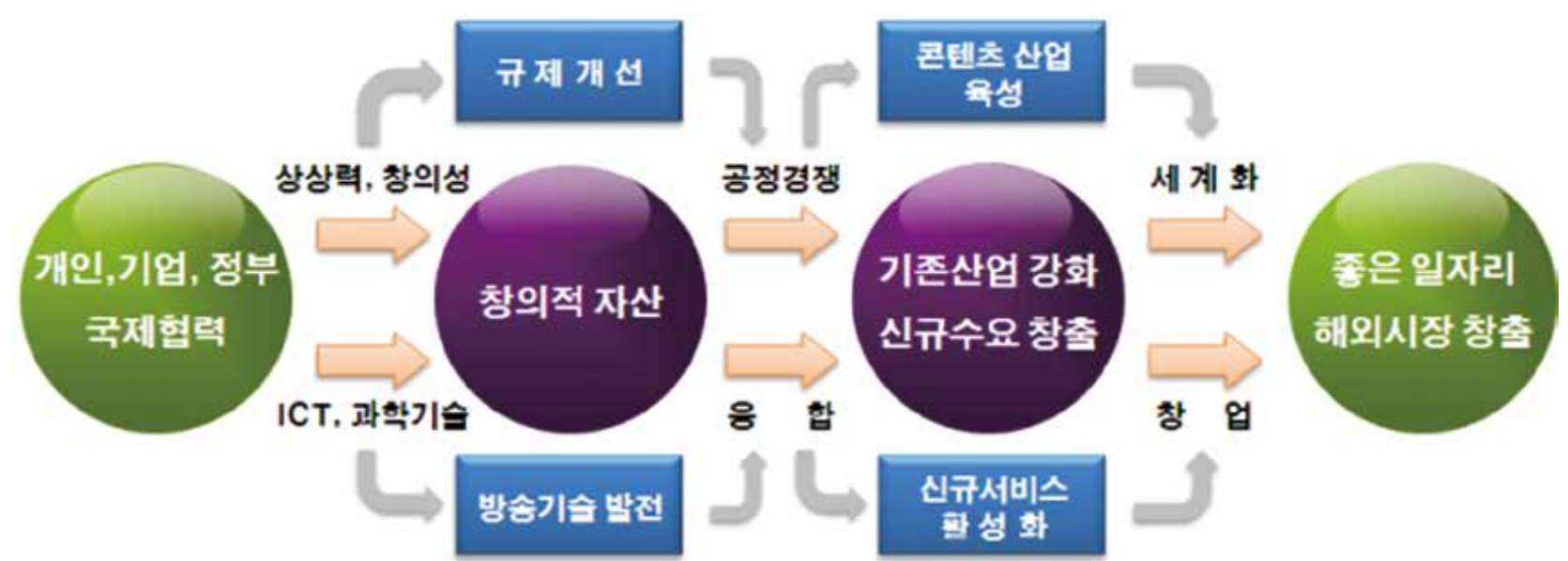
여기에 지상파 MMS가 ‘득’이 아니라는 분석은 8VSB 허용과 맞물리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지상파 MMS를 허가했지만 이는 케이블 MSO의 8VSB 허용과 맞물리면 도루묵이다. 사실상 케이블의 MMS인 8VSB가 지상파 MMS와 상존하면 낮은 유료방송 가입비 및 유인 효과로 인해 MMS에 사활을 건 지상파는 궁극적으로 유료방송에 종속되고 만다. 8VSB 허용이 있는 한 지상파 MMS는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는 뜻이다. 당장 이번 종합계획과 관련해 지상파 MMS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결정을 촉구하고 8VSB 허용을 사제할 것과 광고허용이 누락된 점을 문제 삼아야 할 판이다. 여기에 종합계획의 지상파 MMS가 단순한 요식행위라는 분석도 있다. 전파법의 무선설비규칙의 다중화 규정에는 6MHz 전송채널에 SD급 프로그램을 구성하려면 최소 2개 이상을 강제한다. 반면 방송법은 SD+SD MMS를 못하게 한다. 물론 2HD 기반이면 가능하며 SD+SD를 제외한 다양한 조합은 무선설비규칙 개정사항에 따라 가능하지만, 채널과 프로그램을 연관시키면 지상파 MMS가 가지는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 9일 KBS가 서울전파관리소에 신청한 지상파 MMS 허가가 승인되었다 해도 전파 상용화 가능성은 두고 봐야 한다. ‘득’이 아니다.

UHD도 마찬가지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2020년까지 통신용 주파수 1.3GHz를 확보하겠다는 모바일 광개도 플랜 2.0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사이 방송용 필수 주파수로 손꼽히는

700MHz 대역 주파수는 여유 주파수로 분류되어 주파수 재별인 통신사에게 넘어갈 확률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계획은 유료방송 중심의 UHD를 추진한 11월 14일 초안과 달리 12월 10일 ‘UHD 방송의 상용화는 콘텐츠 제작 및 수급과 기술 R&D(연구개발)·표준화 현황,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해 추진하기로 한다’고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를 연출했으나, 이는 명백한 꼼수다.

비록 UHD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콘텐츠 제작 및 수급이 가능한 매체와 각 매체별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으나 이는 지상파 방송을 UHD에서 배제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3일 미래부 산하 TTA 표준화 운영위원회는 PG802(DTV 프로젝트 그룹)가 제안한 지상파 UHDDTV 표준화 과제 제안을 사실상 강등시켜 기술보고서로 변경했다. 함께 올라온 80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추진되었으나 지상파 UHDDTV 표준화 과제만 기술보고서로 묶인 것이다. 이에 TTA 관계자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방송발전계획 개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기술보고서로 채택되었을 뿐이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TTA 운영위원회 직전 정부 고위 관계자의 압력설도 흘러나오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유럽 EBU의 경우 세계 UHDTV 발전에서 한 발 물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UHDTV 표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TTA의 결정은 미심쩍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게다가 지상파 UHDTV 표준화 과제 채택을 기술보고서로 변경한 사유가 주파수 할당 미비라는 것도 논란이다. 주파수 수급과 별개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명확해진다. 종합계획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UHD 방송의 상용화는 콘텐츠 제작 및 수급과 기술 R&D(연구개발)·표준화 현황,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해 추진하기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표준화 현황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정리하자면, 정부의 종합계획이 지상파 UHD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TTA의 지상파 UHDDTV 표준화 과제 제안이 거부당하면서, 궁극적으로 지상파 UHDDTV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종합계획은

UHDTV 주체에 대한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정부는 뒤로 지상파의 UHDTV 표준화 과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결국 지상파의 UHDTV 자격을 박탈하는 셈이다. ‘득’이 아니다.

지상파 중간광고도 마찬가지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발전계획의 광고제도 개선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 중간광고는 지상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진영에서 반대를 주장하는 분위기다. 또 초안에는 중간광고가 명시되어 있으나 12월 10일 종합계획에는 중간광고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부분도 예상되지 않다. 일각에서는 종합계획의 수신료 현실화 부분과 맞물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 분명한 점은, 지상파 중간광고는 초안보다 후퇴했다. ‘득’이 아니다.

수신료 현실화도 마찬가지다. 종합계획의 수신료 현실화 발표와 동시에 KBS 이사회의 수신료 현실화 결정이 맞물려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당장 수신료 현실화가 종합계획에 실렸다고 해서 이 안건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제출되었을 때 그 누구도 현실

화를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일회성 수신료 현실화는 궁극적으로 KBS2 광고문제와 종편 등 유료방송 광고 지원이라는 문제도 얹혀 있다. 물론 지상파 중간광고도 마찬가지다. 이번 종합계획에 등장한 중간광고, 수신료 현실화 등은 정부가 지상파가 아닌, 유료방송 육성 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상파는 이번 종합계획의 최대 피해자다. ‘득’이라고 분류된 부분도 따지고 보면 ‘실’이며, 동시에 ‘실’이라고 분류된 부분은 치명적이다. 유료방송 규제완화는 플랫폼으로서의 유료방송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킬 것이며 이는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의 해체를 의미한다. 여기에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를 골자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재송신 제도개선안과 8VSB를 앞세운 케이블 MMS는 콘텐츠 시장의 붕괴와 지상파의 근간을 뒤흔들 뇌관이다. 정부의 종합계획이 창조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딜레마가 펼쳐진 것이다. 물론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 포기는 ‘덤’이다. 지상파가 PP로 자리잡길 바라는 정부의 비원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논란의 8VSB, 쟁점은?

정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최종안 발표로 해당안에 포함된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이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8VSB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해당 이슈가 어떤 파급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우선 정부가 8VSB 허용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싶어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케이블 방송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상당히 느린 상황에서 가입자들을 임의로 나누면 1. 디지털 TV를 보유하고 디지털 상품에 가입한 사람, 2. 디지털 TV를 보유하고 아날로그 상품에 가입한 사람, 3. 아날로그 TV를 보유하고 아날로그 상품에 가입한 사람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정부는 8VSB 허용으로 2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고화질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한다. 디지털 TV를 보유했기에 직접수신으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지만, 케이블 아날로그 상품에 가입했기 때문에 디지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8VSB 허용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

첫 번째는 2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만 3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시청권 보장이 어렵다는 점이다. 8VSB가 케이블 MSO에 허용되면 3번으로 TV를 보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TV를 시청할 수

없다.(아날로그는 MMS가 불가능. 게다가 8VSB 허용이 되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구분해 방송을 송출해야 하기 때문에 240MHz를 디지털로, 120MHz를 아날로그로 송출한다고 가정하면 아날로그 TV 시청자는 6MHz 기준으로 채널 숫자가 대폭 줄어 듬) 그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미래부 8VSB 연구반에서 3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컨버터를 나눠주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약 450만 정도로 예상되는 이들에게 무상으로 컨버터를 나눠주는 사업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상파 디지털 전환 당시 450만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컨버터를 보급하는 것도 엄청난 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컨버터가 없으면 3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시청권이 엄청난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 강조하지만, 컨버터가 아니면 3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채널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진다.

두 번째는 8VSB 허용이 짝동 디지털 전환이라는 점이다. 이는 방송산업발전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특혜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인데, 실제로 8VSB가 허용되면 2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굳이 디지털 전환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아날로그 상품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진다. 궁극적으로 완전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지 않을뿐더러, 고화질에만 매몰된 아날로그 단계에서 케이블의 디지털 정책이 멈출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왜 케이블 MSO들이 주장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디지털 전환에서 강점을 가지는 다른 사업자들, 즉 디지털 전환을 끝낸 지상파는 물론 아예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IPTV와 위성방송에 대한 경계심리가 숨어 있다. 케이블 MSO의 입장에서는 낮은 가입비로 인해 광고료와 홈

쇼핑 송출료를 주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IPTV 가입자가 800만을 넘어 900만을 돌파하는 등 유료방송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MSO의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자체적인 디지털 전환이 더딘 속도를 보이며 가입자를 빼앗길 바에야 차라리 고화질 서비스에 매몰된다 하더라도 짝동 디지털 전환인 8VSB 허용을 통해 자사의 가입자를 잡아두자는 전략을 추진 중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일각에서 말하는 ‘디지털 전환의 강점이 고화질뿐’이라는 한계 아닌 한계도 분명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담이지만, 케이블 MSO의 일부는 지금도 8VSB에 대해 완전한 환영의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특혜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8VSB 허용은 방송산업발전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전격적으로 추진되는 이유는 정부의 과도한 특혜라는 틀에서 벗어나 설명이 되지 않는다. 특히 개국 2년을 맞이해 내년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종합편성 채널은 자사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고화질과 지상파 인접번호가 보장되는 8VSB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케이블 MSO의 ‘고화질 홈쇼핑 채널’에 대한 염원이 일치하며 명백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인기 채널인 지상파의 인접채널에 종편이 들어갈지, 홈쇼핑이 들어갈지는 추후 논란을 예고할 것이다. 다만 확실한 점은, 8VSB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은 당사자인 케이블 MSO보다 종편에서 먼저 나왔다는 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지상파 디지털 전환 시기의 종편 언론보도와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담합 TF의 사례를 복기하면 충분히 이해될 것이다.

직접수신을 하락, 해법은 없나(上)



누구나 안테나만 달면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다.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보편적 화질을 통해 보편적 콘텐츠를 보편적으로 접근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규정될 수 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 직접 수신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직접수신율을 높여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 비율은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DTV KOREA 등의 조사 결과로 미뤄볼 때 공식적인 직접수신율(이하 직수율)은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수치는 디지털 전환 이전인 2007년 21.4%, 2011년 14.7%보다 줄어든 것으로 당초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디지털 전환 이후 직수율 하락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다.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대부분의 국가는 디지털 전환 이후 직접수신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만 직수율 하락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1.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만 급급했던 방통위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있다.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급급한 나머지 예정보다 앞



당겨 종료함으로써 직수율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 정책 수립 초기 정부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 보급률이 99%에 달한 이후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31일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도 디지털 방송 수신기 보급률은 80%가 채 되지 않았다. 애초 계획대로 라면 당연히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점을 늦춰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약 1,000만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를 디지털 방송 수신가능 세대에 포함시키는 편법을 통해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강행했다. 심지어 순차 종료 때문에 몇몇 지역에서는 2012년 12월 31일보다 앞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됐다.

생각해보자. 당장 며칠 뒤부터 TV를 볼 수 없다는 자막이 계속 나오고, 화면의 100%를 가리는 상시 가상종료가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때마침 유료방송에서 “지금 유료방송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TV를 볼 수 없다. 무료로 며칠 간 본 뒤 유료방송에 가입하면 할인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솔깃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시청자가 아닌 유료방송 사업자가 되어 버렸다.

2. 법·제도적 장치 부재 … 지상파만 ‘안절부절’

또 다른 문제는 수신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는 수신 설비만 제대로 갖추면 선명한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다. DTV KOREA는 “도심 아파트의 경우 송·중계소의 디지털 신호를 직접 수신하기도 하지만 건물에 부딪혀 굴절되는 반사파에 의해서도 수신이가

능하다”며 “과거 아날로그 전파의 경우 굴절파가 수신되면 TV 화면에 노이즈가 생겼지만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서 선명하게 수신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송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방송 자체가 우수한 수신 성능을 갖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공시청 시설은 물론 단독이나 다세대 등에서도 안테나 같은 수신 설비만 있다면 고화질 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신 환경 개선이야말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수신 환경 개선에 대한 법·제도적인 부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뿐더러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정책적인 지원도 미흡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KBS기술인협회는 “현행법에서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공시청 시설을 하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주택총수를 기준으로 공동주택으로 구분해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다”며 공시청 시설 의무 기준을 층수가 아닌 최소 2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신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시청 시설이 가장 중요한데 현행법으로는 전체 가구를 커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시청 설비란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별로 안테나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도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동 수신 설비다.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에 한해 공시청 설비를 필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방송사 공동으로 DTV KOREA와 KBS의 디지털시청100%재단(이하 100%재단)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시청 설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진행이 지연되고, 지역별로 아날로그 방송이 조기 종료되면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시청 설비 지원 사업 ‘시작부터 난관’

DTV KOREA와 100%재단은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라 발생하게 될 난시청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12년 초 ‘공시청 설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모든 시청자들이 무료로 지상파 방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신 환경을 개선해 매체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이다.

DTV KOREA는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중 직접수신을 희망하는 4세대 이상의 신청자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안테나·

네 번째는 콘텐츠 시장의 붕괴다. 8VSB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콘텐츠의 저가화—무료화, 더 나아가 불법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짝동 디지털 전환이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다.

다섯 번째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것은 바로 8VSB 자체가 다채널 서비스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상파 MMS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를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8VSB의 깊은 곳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현재 8VSB 허용은 정부의 확실한 기조로 보이나,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는 여전히 미궁 속이다.

가장 신빙성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지상파 FULL HD 20개 채널, HD 20개 채널, SD 20개 채널로 총 60개 채널이 8VSB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고화질 서비스를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상파 MMS와 비슷한 구조다. 또 여기에 FULL HD 20개 중 1개 채널이 6MHz를 가져가고, HD 1개, SD 1개씩 6MHz 안에 넣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되면 (FULL HD 20*6)+(HD/SD 20*6)으로 계산해 총 240MHz가 8VSB로 쓰이게 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기존 60개 채널을 총 360MHz로 사용한 점을 감안하면 120MHz를 절약할 수 있으며 남은 자원은 케이블 UHD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한정된 주파수에 얼마 만큼의 채널을 넣을지는 미지수) 이 상황에서 만약 지상파 MMS가 2HD로 현실화되면 재송신 계약상의 문제와 더불어 MMS와 MMS의 충돌이 발생한다. 지상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배선공사 공사비 등을 무상 지원하고, 20세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100%재단 역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시청 설비 공사 금액을 50% 지원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공시청 설비 지원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당초 예상치의 1/3 정도밖에 안 된 것이다. 사실 공시청 설비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전에 완료됐어야 하는 사업이다. 당연히 않은가?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기 전에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블랙아웃 없이 방송을 볼 수 있다. 그런데 DTV KOREA와 100%재단이 지원하는 공시청 설비 지원 사업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불과 9개월여 앞둔 2012년 3월에 시작했다. 사업 시작 자체가 너무 늦은 것이다.

신진규 MBC 디지털기술국 기술관리부장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 신 부장은 “2010년 지상파 방송4사 사장단 모임에서 2011년에 공시청 설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그런데 시범사업 예산이 2억 원에 불과했다. 그리고 2012년에야 비로소 본 사업이 시작됐다”면서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이 안일하게 대처했음을 인정했다. 선제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케이블 등 유료방송의 공세에 밀려 그나마 있던 직접수신 가구마저 유료방송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또한 아날로그 방송 조기 종료와 인력부족이라는 문제가 맞물리면서 공시청 설비 공사 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화면 질만을 가리는 자막과 함께 디지털 전환 안내 방송이 계속되자 공시청 지원을 신청하는 가구들은 몰리는데 인력과 작업 시간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공시청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가구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작업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재작업을 다시 해야 하고 다른 신청 가구는 또 기다려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50% 금액 지원이라는 부분도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 중 하나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케이블 등 유료방송의 요금 체계가 낮음을 지적했다. 그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50%의 비용 부담이 있는데 케이블 방송의 요금 자체가 저렴하다 보니 공시청 설비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시청자들이 공시청 설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철학은 여전히 없다

12월 10일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두고 많은 사업자들의 이점투구가 재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에 방점을 찍은 산업진흥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이번 계획안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연쇄적으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산업을 구성하는 C-P-N-D 산업과 그 외연인 문화산업과 관광, 제조, 유통 등 연관 산업까지 연계시키는 ‘생태계 중심’ 진흥 전략 제시를 목표로 하며 야심차게 5대 전략 및 19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지상파 방송의 형해화에 따른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의 구축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우리는 여기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정책의 간간을 내밀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방송의 규제완화를 명목적으로 비판하기에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정책의 철학부재에 대한 지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두산백과는 철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린다. 철학(哲學)의 ‘哲’이라는 글자도 ‘賢’ 또는 ‘知’와 같은 뜻이라는 전제에서 철학이란 그 자의(字義)로 보아서도 단순히 지를 사랑

한다는 것일 뿐, 그것만으로는 아직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동시에 철학 이외의 학문 가운데 그 이름을 들고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학문은 드물다고 했다. 그 정도로 철학이라는 단어가 주는 중량감은 추상적인 개념과 상학적인 개념에서 첨예하게 충돌한다는 뜻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학문의 대상이 결코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철학이란 이런 것이다. 눈에 보이는 실증적인 증거로 잡아내기 어려운 모호하면서도 경계가 뚜렷한 일종의 무형의 것.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 정부의 방송정책은 철학이 없다. 단 순히 사업자의 요구조건을 동시다발적으로 풀어놓은 것이라 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여기서 정부의 방송정책 철학부재가 부각된다. 방송의 규제완화를 방송시장에서 구현하고 싶었다면 치밀한 정책수립과 충돌 예상지점을 기민하게 살피는 시각이 있었어야 했다. 8VSB만 봐도 그렇다. 케이블과 종합편성 채널에게는 혜택이지만 지상파 방송 입장에서는 재앙이 따로 없다. 그런데 이를 케이블과 종편에 대한 규제완화로만 단편적으로 인식한 부분은 심각한 문제다. 8VSB가 특정 진영에는

이득이지만 특정 진영에게는 불행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누군가에게 하나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를 빼앗는다는 발상은 철학의 부재를 빼고는 이해할 수 없다. 철학은 첨예한 대립의 평면을 하나의 다각형으로 수렴할 수 있는 윤희유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방송정책의 윤희유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철학부재는 더 큰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정책은 산업진흥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산업의 발전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공공의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방송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그런데 정부는 방송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무시하고 무차별적인 산업논리만 재단했다. 물론 최근 상황을 이루는 한류 콘텐츠의 성공이 금전적인 이득으로 이어지고 이를 문화적 종속현상이 아닌, 자본주의적 종속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득세하는 분위기는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한류 콘텐츠의 ‘컬쳐 파워’가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종의 감정적 과잉현상의 이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철학부재는 더욱 명확해진다. 자연스러운 문화적 흐름에서 비롯된 발전계획이 아니라는 점도 확실해졌다. 방송정책의 발표는 더욱 허술해졌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물론 비난받아 마땅하다. 방송정책의 상학적 접근을 이뤄내지 못한 부분은 지탄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획의 성립에 문제가 되는 다른 영역, 즉 계획의 비전과 실제적인 현실화 방안에 있어서 본 계획은 더욱 어두운 전망을 가지게 된다. 순리적인 물꼬를 통해 운명적으로 흘러가야 하는 부분에 집중한 나머지 산업발전의 역센 손아귀로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선언 그 이상의 문제다.

미래부는 국내 방송산업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이 불가피하기에 이번 계획을 통해 기존 콘텐츠 단품수출, 사업자별 개별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글로벌 기획 유통 중심의 지원 강화, 생태계 협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등 해외진출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시 철학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정 원 래 미디어창조연구소 연구위원

DMB, 이제 도약의 시간이다

최근 지상파 DMB 개발에 있어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우선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25일부터 SBS, KBS, MBC가 순차적으로 고화질 DMB를 송출하기 시작했다고 밝히며 지난 5월 한국DMB를 시작으로 8월 YTN DMB에 이어 이번에 지상파 3사가 합류함에 따라 본격적인 고화질 지상파 DMB 시대가 열린 사실이다. N-스크린 기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많은 DMB의 비약을 아쉬워하던 이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같은 소식이다.

여기에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한국이 개발하여 2007년 국제 표준으로 선정된 T-DMB(지상파 DMB) 본방송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당연히 경사다. T-DMB 서비스는 우선 4개 무료 채널로 개시한 뒤에 2014년 상반기부터 5개 채널을 추가한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며 그 규모를 확대할 예정으로, 향후 국내 T-DMB 관련 장비 업체들의 몽골 현지 진출에도 커다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DMB의 시대가 당장이라도 부활의 전조를 알리는 것 같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부터 몽골 T-DMB 상용화

서비스 실시를 위하여 국산 방송장비(송출·송신장비 및 단말기) 지원 및 기술 자문을 통해 시범 서비스 실시를 지원한 등 몽골 T-DMB 본방송 실시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는 DMB의 외연을 넓히려는 일종의 로드맵의 차원이었으며, 국내는 물론 국외의 강력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본방송 서비스 실시에는 T-DMB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몽골 현지 T-DMB 사업자인 UBDMB와 현지 2위의 이동통신사인 UNITEL이 참여하며 유료 서비스를 위한 가입자 관리 장비 등 방송장비 제공에는 국내 방송장비 업체도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DMB, 도약의 시간이다.

하지만 DMB라는 플랫폼 자체를 대상으로 냉정한 평가를 내리면, 전망은 어두워진다. 당장 위성 DMB의 퇴행과 더불어 그 입지 자체가 조금씩 좁아지는 것이 문제다. 여기에 DMB 사업이 수익성을 상실하면서 그 존립기반이 약해진 것은 부당이다. 마지막으로 DMB에 대한 시청자의 일반적인 인식 전환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DMB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최소한 일반 시청자의 관점에서 N-스크린과의 비교우위를 점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데이터와 전파의 속성을 깊숙이 파져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최소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타이틀은 다시 가져와야 마땅하다. 심각해지는 적자의 악순환 속에서 DMB라는 전체 플랫폼 속성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지상파 DMB의 경우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다. 최초 DMB가 미디어 시장을 넘어 새로운 수익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DMB의 정의를 광의적으로 해석해 평가하면, CJ오쇼핑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홈쇼핑 채널의 입점으로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이 가능해졌으며, 이동하며 시청하는 새로운 미디어 디바이스의 확대 및 재생산도 더욱 용이해진다는 평가다. 여기에 고화질 지상파 DMB의 등장에 이은 새로운 디바이스적 속성은 방송의 경계를 허물어 재난방송 등에 특화된 올드 미디어의 부활을 알리는 것 같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국감에서 알 수 있듯이 DMB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어려운 것은 맞다. 하지만 필자는 그 의견에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 광고매출이 30%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특정 디바이스의 퇴출을 걱정할 만큼 대한민국의 미디어 플랫폼 안전장치는 허술

하지 않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고화질 지상파 DMB의 화면 비율과 화질픽셀이 생각보다 낮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디바이스의 진화적 속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지상파 DMB의 성공 가능성과 앞으로의 비전이다. 외연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몽골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대한민국 DMB 기술의 확산은 고무적이다.

미래부는 현재까지 자국의 모바일방송 표준으로 T-DMB 서비스를 채택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노르웨이, 캄보디아, 몽골 등 4개국이며, 베트남, 라오스 등도 T-DMB 상용화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관심도 대단하다. 12일 울란바토르 현지에서 열린 T-DMB 본방송 개국식에는 몽골 정보통신부장청(ICTPA) 청장, 몽골 방송통신 규제위원회(CRC) 위원장, 이동통신사(UNITEL) 대표, UBDMB 대표,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방송관리과장, 한국전파진흥협회 부회장 등 양국의 방송통신 관련 주요 인사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바로 여기에 DMB 전체의 강력한 연속성이 있다. 외연의 확대가 글로벌을 지향한다면 그에 걸맞는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성명서]

정부는 보편적 방송 서비스를 포기하는가



12월 10일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한 차례 발표 연기를 하면서 정리한 수준치고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계획이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방송의 기본적인 속성을 무시하고 철저한 산업논리 속에서 정부 정책을 추진한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이다. 방송정책에 접근하는 정부의 철학 부재가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에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총체적 난국이다. 특히 방송을 공공의 영역에서 이해하지 않고 산업적 낙수효과에 의지해 대책 없이 장밋빛 전망만 남발한 부분은 치명적인 패착이다. 이번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어떻게 하면 방송의 보편적, 공익적 요소를 신장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방송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에만 매몰되어 있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계획안 발표를 통해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2년 전 종합편성채널 개국 당시 2만1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이 현재에 이르러 공염불이 되어버린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계획안에 포함된 장밋빛 전망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방송을 산업적 요소로만 재단한 것도 모자라, 지키지도 못 할 약속을 남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차세대 방송인 UHD 방송 계획을 살펴보면 비록 초안과 달리 노골적인 유료방송 중심의 UHD를 천명하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UHD 발전의 로드맵치고 종합계획의 비전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보편적 UHD 방송에 방점을 찍은 전략이 더욱 구체적으로 등장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정부에 제출한 시청자 복지 중심의 UHD 방송 추진 전략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종합계획에 유료방송에 대한 8VSB 허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특혜, 짝퉁 디지털 전환, 콘텐츠 저가화로 인한 창조경제 역행이라는 비판을 무시하고 8VSB 허용을 추진한 부분은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짝퉁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는 이유가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란 말인가? 궁극적으로 콘텐츠 시장의 붕괴를 야기해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8VSB 허용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종합계획은 정당한 지적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재송신 제도개선과 수평규제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막무가내식 유료방송 규제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종안은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를 고사시키고 유료방송만 육성하려는 후안무치의 결정판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직접 나서 가장 중요한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을 부정하고 일부 사업자의 혜택만 보장하려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 결정일 뿐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도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를 관장하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기계적인 의견 합의에 동의한 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정책을 통해 어설픈 경제적 낙수효과를 노리지 말고,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를 통한 건전한 방송정책을 당장 재수립하라.

2013년 12월 10일 화요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KOBASHOW 2014



24회 국제방송 · 음향 · 조명기기전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2014.05.20-23
COEX, SEOULwww.kobashow.com

주 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이앤엑스

후 원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위원회 · 서울특별시 · KBS · MBC · SBS · EBS · OBS · 한국영상산업협회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별후원 CBS · 아리랑국제방송 · tbs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

